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23. 11. 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1. 10.
- 상정일자: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2.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정 기 현)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이행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인용 상위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 위촉직 위원 비율(과반수)을 규정하는 조문 추가(안 제6조)
 -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조문 추가(안 제19조)
- 인용된 상위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17조, 안 제19조)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 찬 규)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구에서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대학교 부설 산학협력단이나 기타 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는 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역 관리 수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 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았고 연구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도 비공개율이 29.1%에 이르는 등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다수고 또한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해 수행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곳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도 제기 되었음.

○ 또한 과제 선정시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들은 관여하지 못하게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해 위촉직 위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 될 것으로 봄.

－ 안 제19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짐.

○ 그 밖에 조례 근거 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되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